

IME653, Unstructured Data Analysis, 강필성교수님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이용한 조선일보 이슈 오너쉽(Issue Ownership)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전진오(박사과정) · 김선우(석사과정)

문제제기

- **커뮤니케이션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 물리적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수량적 그리고 재연 가능한 방식으로 콘텐츠 자체에 대해 기술하거나 그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윤영민, 발간중)

- **한계**

- 분석 데이터 규모, 코더간 신뢰도, 시간 및 비용, 연구자의 주관성 개입 등 현실적 문제 발생(Danowski, 1993)

- **Motivation**

- 수작업의 본질적 한계는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는 동기(이학연·강필성, 2016)

언론의 현실구성: Frame

- 섯슨 (Schudson, 1995)
 - 사회적 수준에서의 '공적 지식(public knowledge)'의 기록
- 엔트만(Entman, 1993)
 - 이슈 규정(problem definition), 원인 해석(causal interpretation), 도덕적 평가(moral evaluation), 처리 방법 제시(treatment recommendation)
- 아이언거(Iyenger, 1991)
 - 일화 중심적 프레임(episodic frame), 주제 중심적 프레임(thematic frame)
- 세멧코와 발켄버그(Semetko & Valkenburg, 2000)
 - 책임성 프레임(responsibility frame),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 인간적 관심사 프레임(human interest frame), 경제적 귀결 프레임(economic consequences frame), 도덕성 프레임(morality frame)

조선일보 Vs 한겨레

표 1.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사건 담론들

이선민, & 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언론과 사회*, 23(4), 5-66.

	조선일보	한겨레
사건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비극 • 국민적 재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대형 참사 • 국가적 신뢰 위기
사건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규칙, 기초 규정 무시 • 공직사회 부조리, 민간사회 적당주의 • 국제적 경쟁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 • 정부의 총체적 무능, 무책임 • 민간의 무책임과 적당주의
사건의 수습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개조, 적폐청산, 국민의식 변화 • 국민 안전 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 • 유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세월호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시 • 초법적 결정, 법외 권리, 특혜 •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의혹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판명 • 참사의 극복과 치유
사건 이후 지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 안전하고 부강한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중심의 사회 • 안전한 사회

이슈 오너쉽(Issue Ownership)

- 이슈소유권은 각 정치 세력이 우세한 문제해결 능력 및 수행 능력을 보여온 이슈 영역에 대해 국민이 일반적인 지식과 관념을 가진다는 이론(Petrocik, 1996)

보수: 국방, 경제 | 진보: 복지, 민주주의 등

- 정당은 가진 이슈소유권을 위주로 선거캠페인 진행하면서 투표자 층 확대
- 신문도 각 정파성에 맞는 주요 독자층이 선호하는 아젠다셋팅(Agenda Setting)을 통해 이슈소유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구독자를 유지, 증진시키는 방안



연구문제

- 연구문제1:

- 보수, 진보 매체의 박근혜 관련 사설 토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문제2:

- 보수, 진보 신문의 토픽 오너십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료수집 방식

- 수집기간
 - 박근혜 정권기(2013/02/25-2017/03/10)
 - 기사내 '박근혜' 포함 사설
- 출처
 -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 한겨레(<http://www.hani.co.kr>)
- 특성
 - 조선일보: 온-오프 일자 동일(966건)
 - 한겨레: 온-오프 일자 1일차 발생(1,646건)



분석결과: 수집자료의 특성

- 신문사별 연도별 박근혜 관련 사설의 수

신문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Total
조선일보	203	213	217	312	945
한겨레	446	387	319	475	1,627
Total	649	600	536	787	2,572

신문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Total
조선일보	7.9%	8.3%	8.4%	12.1%	36.7%
한겨레	17.3%	15.0%	12.4%	18.5%	63.3%
Total	25.2%	23.3%	20.8%	30.6%	100.0%

Crawling 방식 소개

```
library(httr)
Open Link (Command+Click)

# start analysis
url = "http://search.chosun.com/search/news.search?query=%22%5B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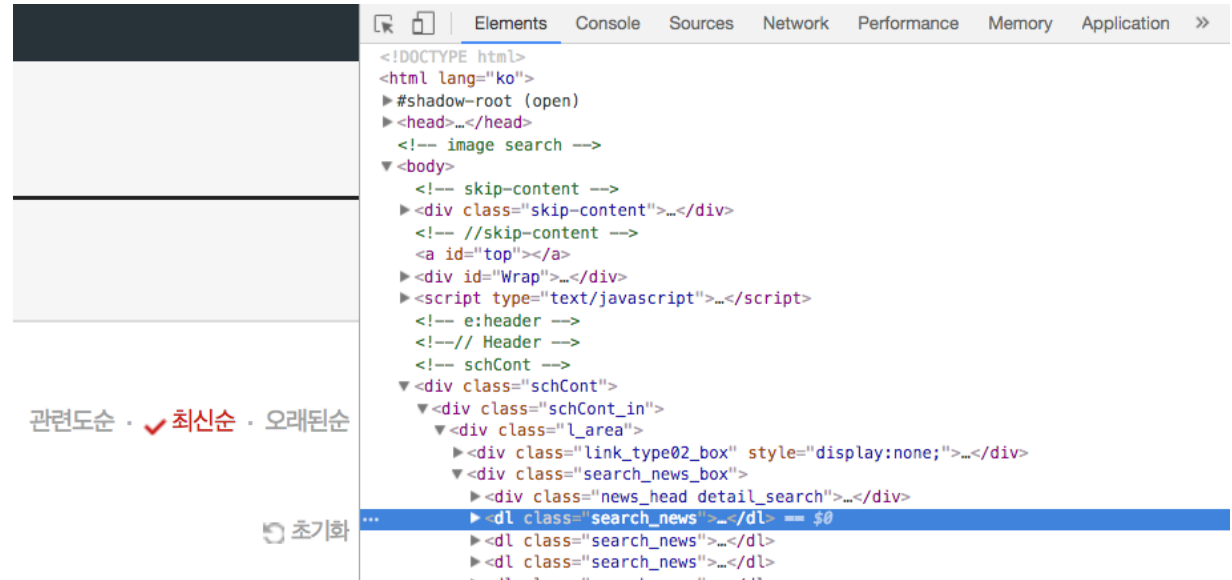
start <- proc.time()
date <- NULL
title <- NULL
body <- NULL
cate <- NULL
url_list <- NULL

for( i in 1:10) {

  tmp_url <- modify_url(url, query = list(pageno = i))
  tmp_url <- htmlParse(tmp_url)
  tmp_list <- xpathSApply(tmp_url, "//dl[@class='search_news']//dt/
```

XPATH

Sys.sleep(runif(1, 3, 5))



Chrome, Inspect syntax catch

if (is.null(tmp_list)){next} 등 활용,
중간에 포맷 바뀌는 기사 건너뛰기 등

	date	media	title	body	url_list
27	10/03/2017 03:18	조선일보	오늘 시험대 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승복'으로 위기 끝	헌법재판소가 오늘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작년 10월 5일 검찰이 최순실 사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9/2017030903
28	09/03/2017 03:14	조선일보	10일 탄핵 심판 선고, 모두 自重하고 또 自制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10일로 확정됐다. 현재 재판관 8명이 8일 평의(評議)에서 결정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8/2017030803
29	07/03/2017 03:19	조선일보	특검, '최순실 국정농단'의 本流 罪愆은 수사였나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6/2017030603
30	07/03/2017 03:18	조선일보	중국 망인지 착각해 한 롯데 앞 촛불 시위대	지난 4일 방 광주 롯데백화점 앞 촛불 시위 사진은 눈을 의심케 했다. 수백 명이 "롯데는 낙성하라"고 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6/2017030603
31	06/03/2017 03:20	조선일보	문명의 일주일, '탄핵' '기각'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현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라의 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5/2017030501
32	06/03/2017 03:19	조선일보	'美, 전술핵 재배치' 검토하는데는, 우리 누가 챙기나	뉴욕타임스 2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5/2017030501
33	02/03/2017 03:14	조선일보	촛불-태극기, 앞으로 열흘만이라도 집회 중단을	3·1절 98주년인 1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광장 일대에서 촛불-태극기집회가 각각 열렸다. 경찰 1만60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1/2017030101
34	01/03/2017 03:14	조선일보	역사적 탄핵 심판 첫 평의, '절대 非공개'로 현재 보호해야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평의(評議)를 열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8/2017022803
35	28/02/2017 03:19	조선일보	마지막까지 핵심 의문에 답하지 않은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현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를 통해 "제 불찰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7/2017022703
36	27/02/2017 03:20	조선일보	탄핵 찬반으로 두 쪽 난 사회, 꼭 끝을 봐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연다. 다음 달 초 선고가 유력하다. 최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6/2017022601
37	25/02/2017 03:09	조선일보	'시위 참여' '현재 불복' 정치인들 大選 말고 시민단체 가야	오늘도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일대에서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대규모로 열린다. 촛불은 17번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4/2017022402
38	24/02/2017 03:19	조선일보	현재서 벌어진 광경, 파국 예고편일 수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중에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3/2017022303
39	23/02/2017 03:20	조선일보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	22일 현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광우 변호사가 "현재가 (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3
40	23/02/2017 03:18	조선일보	우병우, 최순실 사태 최대 책임자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22일 법원이 기각했다. 무엇보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직무 유기 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3
41	22/02/2017 03:20	조선일보	김정은의 兄 독살 테러도 '있을 수 있다'는 文측 위원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의 김정남 독살에 대해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1/2017022103
42	22/02/2017 03:19	조선일보	탄핵 찬반 파고쳐 정면충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재판부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사이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1/2017022103
43	21/02/2017 03:14	조선일보	"현재에 따르지" 촛불 들기를 멈춘 안철수의 소신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촛불 집회에 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0/2017022002
44	21/02/2017 03:12	조선일보	문명고 숲 교장 같은 분, 백명 천명 나와야 교육이 선다	새 역사 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교과는 결국 전국교사 경쟁 구상식 문명고등학교 한 곳만 이름을 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0/2017022002
45	20/02/2017 03:18	조선일보	우병우 결국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 주목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9/2017021901
46	18/02/2017 03:20	조선일보	이재용 구속, 뇌물 줬는지 피해자인지 법정서 가려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7/2017021703
47	18/02/2017 03:19	조선일보	70% 對 11%	지난 14~1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범(汎)야권 대선 주자 지지를 합계가 70%로 나타났다. 문재인·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7/2017021703
48	16/02/2017 03:18	조선일보	대통령이 도피한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127번 통화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지난해 6개월간 573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 도피 중일 때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5/2017021503
49	15/02/2017 03:18	조선일보	특검 결국 이재용 영장 재청구, 의지인가 오기인가	특검이 결국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4/2017021403
50	14/02/2017 03:13	조선일보	여야 '현재 승복' 합의, 촛불-태극기 세력도 승복 선언해야	여야 4당이 1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느 쪽으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3/2017021302
51	14/02/2017 03:12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지지율 '0' 가까운 대선 주자가 10여명	새누리당이 13일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새누리당' 당명은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3/2017021302
52	13/02/2017 03:10	조선일보	이재용 再소환, 정상 수사인가 먼지떨이 수사인가	최순실 사건 특검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2/2017021201
53	11/02/2017 03:09	조선일보	나라 걱정한다면 대선 주자들 현재 압박 시위 불참해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0/2017021002
54	09/02/2017 03:20	조선일보	憲裁 법학 세력 심각한 불복종 투쟁 직면할 것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각 당당이 자기를 지지층을 선동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움직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8/2017020803
55	07/02/2017 03:19	조선일보	朴 대통령 774억 왜 최순실에 맡겼는지 설명할 때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냈다. 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6/2017020602
56	06/02/2017 03:20	조선일보	대선 '野·野 대결' 가능성까지 있다는데	새누리당이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명(黨名)을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다. '보수의 힘'이라는 명칭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5/2017020501
57	06/02/2017 03:19	조선일보	대선주자들 '태극기 집회' 저변의 '안보 걱정' 무시 말라	지난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렸다. 눈에 띄는 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5/2017020501
58	04/02/2017 03:08	조선일보	反美 본색 드러내는 촛불 주도 세력, 시민이 쫓아내야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3/2017020302
59	04/02/2017 03:07	조선일보	한국 해운 산업 몰락 '최순실'보다 더 큰 罪	경연년에 몰려 법정관리를 받아오던 한진해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3/2017020302
60	03/02/2017 03:16	조선일보	보수 정치, 아직 바닥 아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불만을 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2/2017020203
61	02/02/2017 03:20	조선일보	반기문 사퇴 이후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1/2017020102
62	01/02/2017 03:19	조선일보	國定교과서와 質로 승부할 자신 없으면 도태돼야	교육부가 31일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함께 공개했다. 최종본은 광복 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31/2017013102
63	01/02/2017 03:18	조선일보	최순실, 장차관·수석 이어 大使 임명도 개입했다니	최순실씨가 유재경 주(駐)미안마 대사 임명 및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31/2017013102
64	27/01/2017 03:19	조선일보	박 대통령 변호인단 '중대 결심' 발언 거둬달라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단, 최순실씨와 최씨 변호인이 25~26일 잇따라 탄핵 재판과 특검 수사의 공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6/2017012602
65	26/01/2017 03:13	조선일보	憲裁, '편파 재판' 빌미 줄 언행에 신중해야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3
66	26/01/2017 03:12	조선일보	최순실 국정 농락이 '거짓말의 산'이라는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 농락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3
67	26/01/2017 03:11	조선일보	위험한 대치 국면서 벌어진 '朴 대통령 누드화' 파문	민주당 표창열 의원이 25일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국회 전시를 추진해 파문을 일으킨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5/2017012503
68	25/01/2017 03:14	조선일보	국회 朴 대통령 누드 전시, '野 권력' 오만 度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열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추진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알몸으로 풍자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4/2017012402
69	23/01/2017 03:20	조선일보	정치권 50대 역할론 주목한다	민주당의 50대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지사는 "시대(時代)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2/2017012201
70	23/01/2017 03:18	조선일보	수갑 찬 김기춘·조윤선 모습을 보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구속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2/2017012201
71	21/01/2017 03:08	조선일보	그래도 法官이 허악한 우리 法治를 지키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향해 SNS 등을 통해 비난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0/2017012002
72	20/01/2017 03:19	조선일보	특검, 국정 농단 本流 수사로 돌아가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가 관계와 부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9/2017011902
73	20/01/2017 03:17	조선일보	朴 대통령 왜 차명폰 갖고 있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9/2017011902
74	19/01/2017 03:20	조선일보	군 복무 기간이 선거 도박판 판돈 된 나라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청년과 노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8/2017011803

LDA

Textual Analysis in sociology Until now

1. simply read texts and produce virtuoso interpretations based on insights their readings produce
2. create a coding sheet, and then code texts by reading them(Holsti, 1969)
 - 1) impractical
 - 2) the more interesting question, the more hard to get intercoder reliability
 - 3) the approach presumes researcher knows what is worth finding in the texts before having analyzed them.
3. using computer programs to search texts for keywords and comparing subsets of texts with respect to the prevalence of those keywords(Stone et al., 1966)
-> it violates fundamental principle of sociology that meaning emerges from relations among te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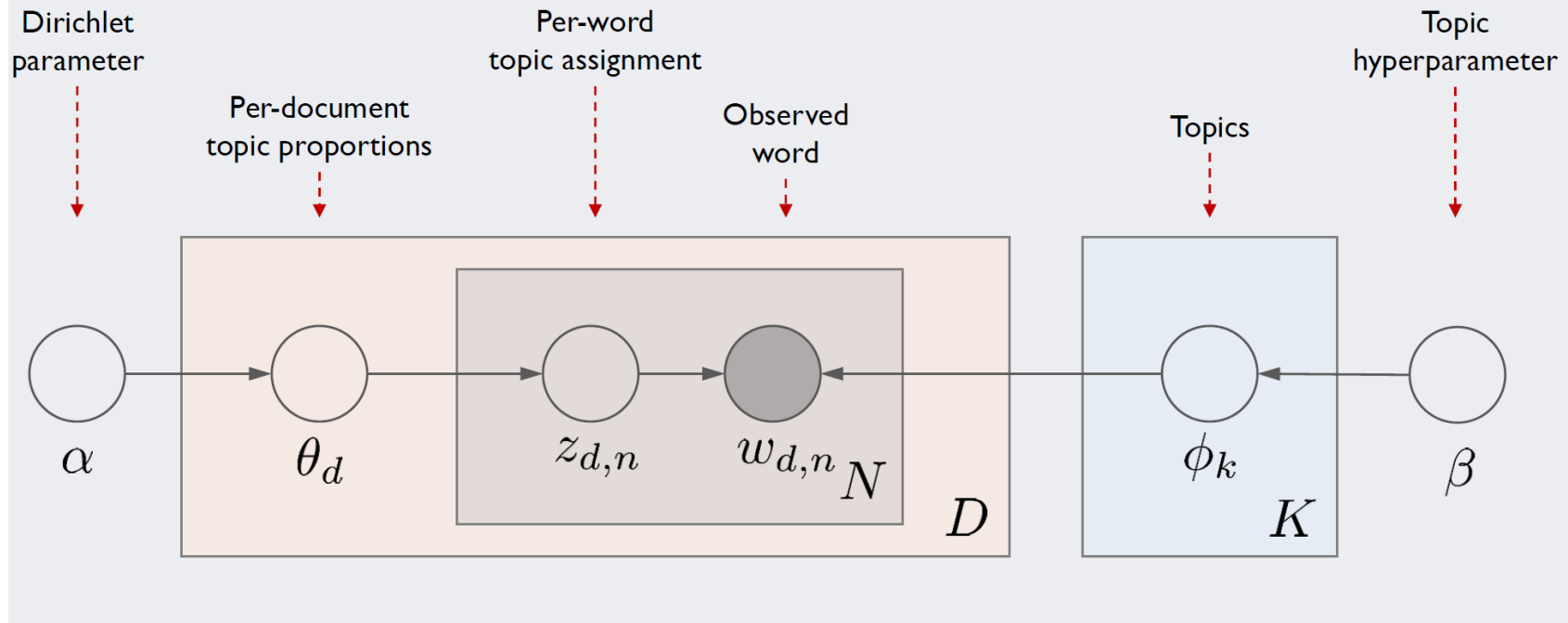
LDA

Future Textual analysis in Sociology

- Explicit
 - data available for researcher to test interpretations and reproduce
- Automated
 - the huge amount volume of text
- Inductive
 - do not need to impose *priori* & discover the structure of corpus
- Recognize the relationality of meaning
 - by treating terms as varying in meaning across different contexts.

LDA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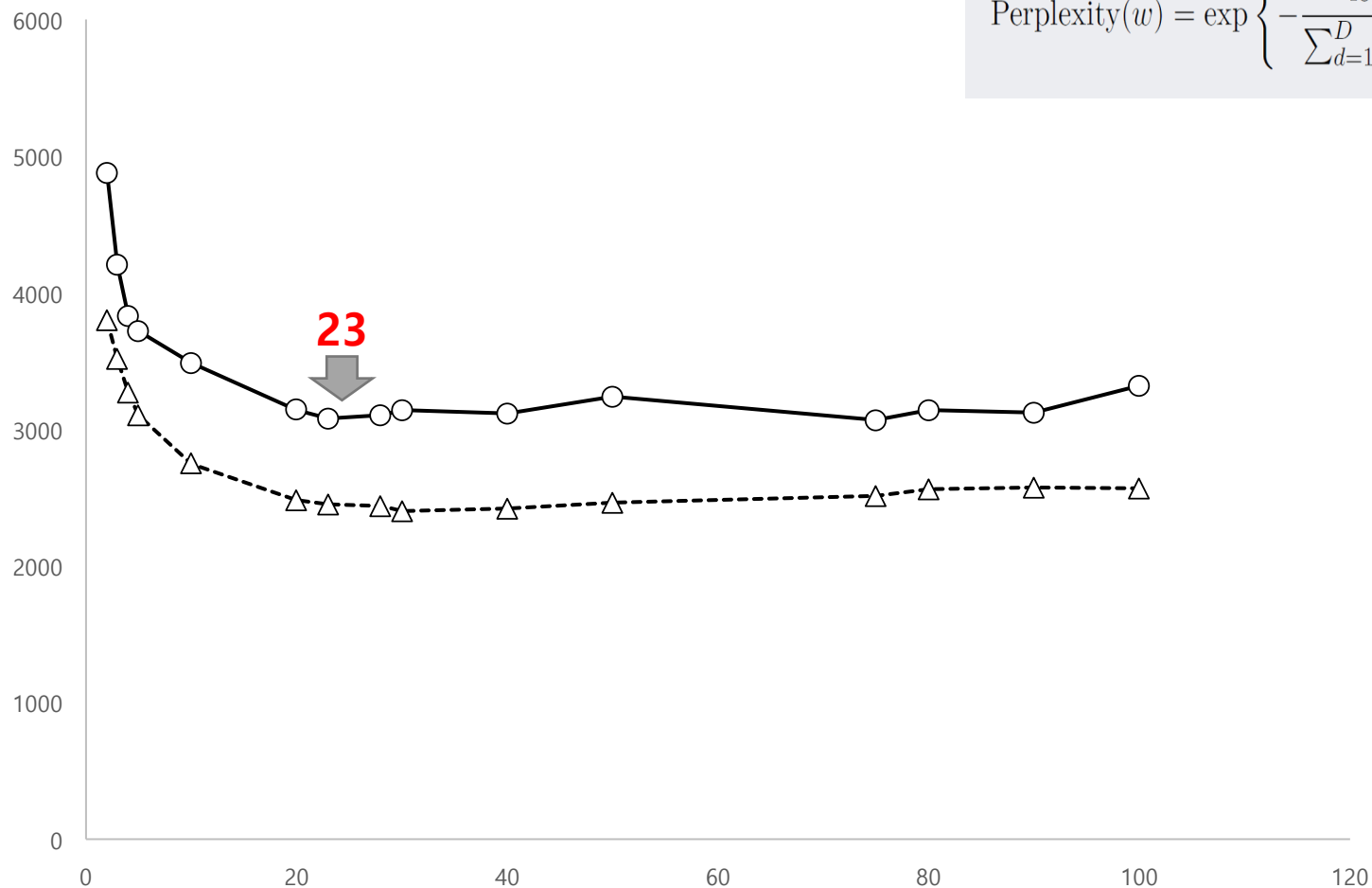
- Document exhibit multiple topics



LDA satisfies all four conditions (DiMaggio et al, 2013)

Perplexity(w) Results

- 최종 23개 도출 —○— test.p - -△- - train.p



$$\text{Perplexity}(w) = \exp \left\{ -\frac{\log(p(w))}{\sum_{d=1}^D \sum_{j=1}^V n^{(jd)}} \right\} \quad \log(p(w)) = \sum_{d=1}^D \sum_{j=1}^V n^{(jd)} \log \left[\sum_{K=1}^k \theta_K^{(d)} \beta_K^{(j)} \right]$$

#	test.p	train.p
2	4,874	3,797
3	4,207	3,514
4	3,829	3,272
5	3,718	3,106
10	3,487	2,749
20	3,144	2,483
23	3,080	2,451
28	3,102	2,441
30	3,140	2,401
40	3,114	2,417
50	3,237	2,460
75	3,068	2,510
80	3,139	2,562
90	3,121	2,571
100	3,322	2,566

TOPIC Results

	Topic1 재벌	Topic3 사드	Topic4 국회	Topic5 위안부	Topic6 국방	Topic7 박정희	Topic8 역사 교과서	Topic9 집회	Topic10 새누리당	Topic11 야당	Topic12 탄핵
Word 1	재벌	사드	국회	아베	군	민주주의	교과서	경찰	의원	대표	탄핵
Word 2	회장	배치	야당	총리	국방부	시대	교육부	집회	대표	야당	대통령
Word 3	기업	지역	여당	일	전작권	사회	역사	시위	새누리당	대선	촛불
Word 4	총수	경북	여	위안부	국방장관	민주화	국정화	정부	총선	선거	헌재
Word 5	경실련	성주	법안	정부	전환	박정희	교육	자유	공천	후보	총리
Word 6	경제민주화	주민들	대표	관계	환수	역사	대학	단체	당	정치	결정
Word 7	회사	주민	처리	문제	사업	대한민국	학교	폭력	친박	문	국회
Word 8	대기업	반대	원내대표	정상회담	안보	나라	역사교과서	비판	여당	민주당	집회
Word 9	사면	신공항	여야	일본의	기술	김대중	국정교과서	어버이연합	원내대표	정당	헌법
Word 10	재계	결정	새누리당	역사	개발	기념식	학생	민주주의	사람	야권	심판

	Topic13 언론	Topic14 노동	Topic15 북한	Topic16 세월호	Topic17 북핵	Topic18 4대강	Topic19 국가정보원	Topic20 경기활성화	Topic21 인사	Topic22 최순실	Topic23 복지
Word 1	보도	정규직	남북	세월호	북한	사업	국정원	정부	인사	검찰	정부
Word 2	방송	정부	북한	참사	문제	4대강	사건	경제	후보자	수사	예산
Word 3	언론	노조	북쪽	정부	중국	감사원	검찰	규제	총리	청와대	공약
Word 4	문화방송	노동	대화	특별법	미국	정부	대선	정책	장관	의혹	복지
Word 5	공정성	노동자	북	메르스	미	감사	수사	기업	청와대	대통령	세금
Word 6	한국방송	전교조	정부	구조	핵	원전	개입	경기	출신	수석	증세
Word 7	정권	노사정	개성공단	조사	정부	진주의료원	대화록	투자	임명	사실	부담
Word 8	언론인	민영화	문제	안전	북	추진	원장	대책	사람	특검	재정
Word 9	공영방송	경우	남북관계	대응	미사일	비용	국가정보원	박근혜	자리	혐의	기초연금
Word 10	기사	노동시장	도발	유족	정상회담	병원	의혹	일자리	정부	재단	지원

TOPIC별 주요 기사(국회)

보도일시	토픽	신문사	기사 제목
2014-09-18	국회	조선일보	또 선진화법 탓하는 與, 정국 풀기 위해 뭘 했나
2016-01-22	국회	조선일보	野가 법안 하나 양보했다고 '식물 국회법' 그대로 둘 순 없어
2013-11-14	국회	조선일보	국회先進化법 생색낸 게 언젠데 벌써 이러나
2013-09-25	국회	한겨레	‘누워서 침 뱉는’ 여당의 선진화법 개정 주장
2014-04-01	국회	한겨레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불통’이 문제다

또 선진화법 탓하는 與, 정국 풀기 위해 뭘 했나

새누리당이 17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해 민생 법안 통과를 막고 있어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진화법은 여야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의석의 절반(150석)을 넘는 158석의 다수당인데도 선진화법 규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지금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라는 국민 여론과 정부·여당의 호소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도 선진화법을 믿어서이다. 야당이 소수파인 자신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을 오용(誤用)·남용(濫用)함으로써 선진화법을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몰아간 셈이다.

그러나 2년 전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이미 “식물(植物) 국회를 초래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폭력 국회를 없애고 대화 정치를 되살려야 한다”며 입법을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이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빨리 법을 만들라”고 재촉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

되자 “역사적 순간”이라고 자찬(自讚)했다. 실제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회는 해마다 쇠사슬, 해머, 자전거 체인, 소화기, 최루탄까지 동원되는 ‘폭력 국회’의 추태를 되풀이했다. 선진화법 이후 이런 물리적 충돌은 사라졌다.

선진화법 시행 후 첫해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676건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나 이명박 정부 첫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선진화법이 국회 운영을 ‘어렵게’ 만들지는 몰라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선진화법을 바꾼다고 해서 여당이 법안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선진화법이 아니어도 야당이 동의하거나 최소한 묵인하지 않으면 여당은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게 국회 현실이다. 무엇보다 선진화법 개정 자체가, 60%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선진화법 규정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선진화법을 탓하기에 앞서 그동안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대야(對野) 소통에 최선을 다했는지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맞다. 여당이 합리적 논리로 충분히 설득했는데도 야당이 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계속 민생을 발목 잡는다면 국민이 먼저 나서 그 법의 개폐(改廢)를 요구할 것이다.

‘누워서 침 뱉는’ 여당의 선진화법 개정 주장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소송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야당이 선진화법을 국정 발목 잡기에 이용하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고, 선진화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새누리당은 당내 변호사 의원들을 중심으로 티에프를 구성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회법 조항을 일컫는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반(150석)이 조금 넘는 새누리당 의석(153석)으로선 사실상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돼온 집권여당의 날치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 법은 여야가 국회에서 불쌍사나운 폭력을 없애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처럼 합의로 만들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만든 법을 위헌 소송이라도 해서 바꿔 보겠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한마디로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선진화법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표가 새 정치를 표방하며 이 법 도입에 앞장섰다. 그런데 총선, 대선이 끝났다고 이

조항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집권당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해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다.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황우여 대표는 이 법을 두고 “선진 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고 말했고, 남경필 의원은 “여야 대타협으로 만들어낸 선진화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없다. 사전에 문제점을 예단해서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야당도 선진화법을 볼 모로 비합리적인 저지 투쟁만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일각의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은 그간 계속돼온 집권세력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궤를 같이한다. 도무지 대화와 타협으로 정국을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 야당을 밀어붙일 생각만 하는 것이다. 선진화법 개정 주장은 야당이 거처적거리니 옆으로 치워버리자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정 운운하기에 앞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TOPIC별 주요 기사(집회)

보도일시	토픽	신문사	기사 제목
2016-04-20	집회	한겨레	‘탈북자 알바’ 동원한 보수단체의 돈줄과 배후
2013-07-18	집회	한겨레	집회 보장 요구하는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라니
2015-11-16	집회	조선일보	大入 논술 시험 날 도심 테러性 시위, 기획자부터 엄벌하라
2014-08-12	집회	한겨레	5.18 광주정신 스스로 허문 광주비엔날레
2014-04-01	집회	한겨레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불통’이 문제다



‘탈북자 알바’ 동원한 보수단체의 돈줄과 배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탈북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각종 친정부 집회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그 돈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퇴직 경찰관 단체인 재향경우회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사서 만든 집회는 여론 조작의 명백한 폭력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짓이다. 그 돈을 전경련이 댔다면 경제권력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다.

보수단체들이 연일 벌이는 집회에 대해선 진작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집회부터 경제활성화법 제정 촉구 집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비판 집회 등 각종 시국현안마다 발빠르게 연 수백 차례의 집회는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 특히 청와대의 입장을 대놓고 편드는 것이었다. 자발적인 참여라기엔 믿기지 않는 집회 내용이나 시기, 방식도 의문이었거니와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예상대로 수상한 커넥션이 있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어버이연합의 집회 회계장부에는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102차례 연 세월호 반대 집회에 7618만원의 알바비를 들여 모두 3809

명의 탈북자를 고용한 것으로 돼 있다. 엄마부대라는 단체도 탈북자들에게 돈을 주고 집회를 열었다는 증언이 있다. 돈의 출처도 나왔다. <제이티비시>(JTBC) 보도에 따르면,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로 보이는 계좌에 2014년 9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경련 이름으로 1억2000만원이 입금됐다. 계좌에는 어버이연합 사무실 임대료 등이 나간 흔적이 있고, 탈북자단체에 2900만원이 송금된 기록도 있다. 동원된 탈북자들의 알바비로 보인다. 어버이연합은 계좌에 4000만원이 입금된 다음날인 9월6일 전경련이 강하게 요구하는 법안처리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인위적인 여론몰이의 명백한 정황이다.

돈줄이 드러났다면 그 배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을 동원해 연 집회는 대부분 그때그때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이었다. 집회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면 그 뒷선이 어디인지도 드러날 터이다.

의혹의 음습한 실체가 확인해졌으니 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大人 논술 시험 날 도심 테러性 시위, 기획자부터 엄벌하라

14일 서울 광화문, 시청 앞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 총궐기 대회’엔 경찰 추산 6만8000명, 주최 측 추산 13만명이 참여해 경찰과 충돌을 빚은 끝에 51명이 연행됐다. 경찰이 최루액과 물 대포를 쏘며 시위대의 불법 행진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113명과 시위대 29명이 부상을 입었고, 농민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은 수험생 12만여 명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시위대는 하필 수험생과 학부모가 1년 중 가장 애를 태우는 날을 골라 과격 폭력 시위로 서울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시위 단체들은 이날 낮부터 서울광장·대학로·서울역 등 반경(半徑) 4~5km 이내의 분산된 20여 장소에서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제각각 사전 집회를 가졌다. 이후 광화문광장에 모두 집결해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과 정면충돌하며 자정 무렵까지 7시간 동안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시위가 지난 2008년 봄에 벌어졌던 광우병 시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시위 규모보다 폭력 양상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線)을 넘어섰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시위대는 경찰 차벽(車壁)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경찰 버스 창문을 쇠파이프로 부셨다. 폭발성 강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버스 안으로 던지거나 불붙은 신문지를 집어넣어 방화(放火)를 시도하기도 했다. 총포류만 동원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테러범들 소행에 맞먹는 과격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이 쇠파이프·각목으로 두들기고 밧줄로 끌어당기면서 경찰 버스 50여 대가 파손됐다.

이날 시위는 진보 좌파 단체들이 총출동해 고도로 조직화된 양상을 보였다. 시위를 주최한 것은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교조 등 좌파·진보 계열 단체 53곳이다. 핵심적 역할을 한 진보연대는 광우병 시위와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사건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한 전문 시위꾼 단체다. 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로 판정받은 몇몇 단체도 주

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노동 개혁 철폐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쌀값 폭락 저지 등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국정원 해체’ 등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 따른 교통 마비로 이날 서울 시내 대학 11곳에서 논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험생들이 대비를 하긴 했지만 시험을 못 보거나 지각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올해 대입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논술 시험을 보는 날을 집회 날짜로 정한 것은 주최 측이 시위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전 신고된 집회 범위를 넘어 행진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차 방화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 폭력 시위다. 시위 주도자 중 한 사람인 한상균(53) 민노총 위원장은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재판에 불출석해 경찰 수배를 받아오던 중 이날 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또 놓치고 말았다. 한 위원장은 경찰을 조롱하듯 서울광장에 진입해 “언제든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연설했다. 시위가 조직적으로 기획됐을뿐더러 나라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진압 방식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심 불법 폭력 시위를 두둔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직접 폭력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시위를 조직한 기획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 당국은 이번 폭력 시위를 기획한 사람들부터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폭력 시위를 기획한 주모자들을 색출하지 못하면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체포해도 불법 시위를 막을 수 없다.

TOPIC별 주요 기사(노조)

보도일시	토픽	신문사	기사 제목
2013-02-24	노조	한겨레	느닷없이 전교조 노조 자격을 박탈한다니
2013-12-02	노조	한겨레	불법파견 시정 않는 업체들에 엄중한 처벌을
2013-09-23	노조	한겨레	전교조에 대한 위협 즉각 중단해야
2013-10-09	노조	한겨레	국제적 망신살 뻗친 노동부의 전교조 겁박
2013-12-09	노조	한겨레	좁은 나라에서 철도 경쟁체제가 효율 있나



느닷없이 전교조 노조 자격을 박탈한다니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자격 문제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자격을 박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가 이를 어기고 규약을 통해 해직교사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해직교사의 전교조 가입은 14년 동안이나 지속돼온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한 때에 왜 노동부가 갑자기 초강경의 칼을 휘두르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동부는 조만간 전교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 안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0년과 2012년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고쳐지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이번엔 자격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처가 이뤄지면 교사의 노동3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현재 20여명인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벌이다 해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 동안 교사들이 해직된 것은 시국선언 참여, 정당 소액 후원

금 제공, 사학비리 투쟁 등이 주된 사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지 해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조합원 자격을 뺀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누구든 노조 활동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 노조의 활력이나 교섭력이 약화될 게 뻔하다.

6만여명의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가 극소수에 불과한데도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다. 노조 자격을 잃어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현직 교사가 전교조 전임자로 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해직교사 노조원들로 인해 전교조의 자주성과 단체성, 목적성 등이 훼손되는 것도 아닌데, 노조 자격을 박탈해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전교조는 어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개정 불가' 방침을 정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와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가뜰이나 '노동 배제'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교조를 압박할 경우 정치·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뿐이다. 노동부는 원칙도 타당성도 없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불법파견 시정 않는 업체들에 엄중한 처벌을

쌍용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왔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자동차까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면서 대다수의 완성차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재판부가 쌍용차의 경우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근거들을 보면, 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한 점, 쌍용차 소유의 설비와 공구를 사용한 점, 쌍용차 관리자가 직접 지시한 점 등이다. 이는 쌍용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판단의 기준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문제는 법원의 이런 판결이 잇따라도 현실에서는 별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부당해고 8년 만인 올해 1월에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씨 한 사람만 정규직 발령을 냈을 뿐, 사내하청 노동자 1600명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국지엠도 불법파견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2005년 노동부에 진정한 사내하청 노동자 843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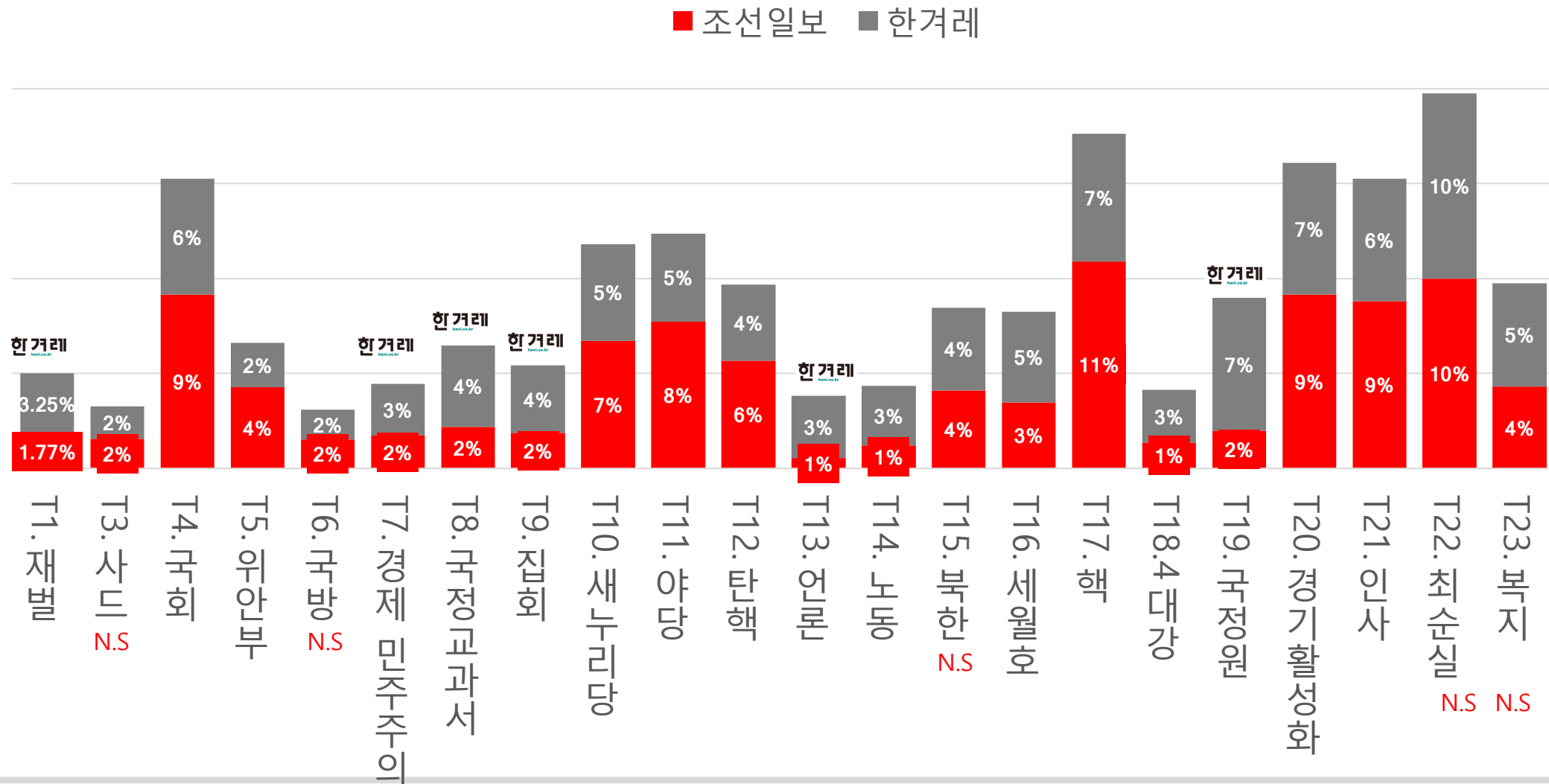
불안정한 고용이라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비정규 노

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싸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판결조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원 판결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법원의 최종 결정마저 모독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 판결이 무기력하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분명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와 관련한 공약을 한 바 있다.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약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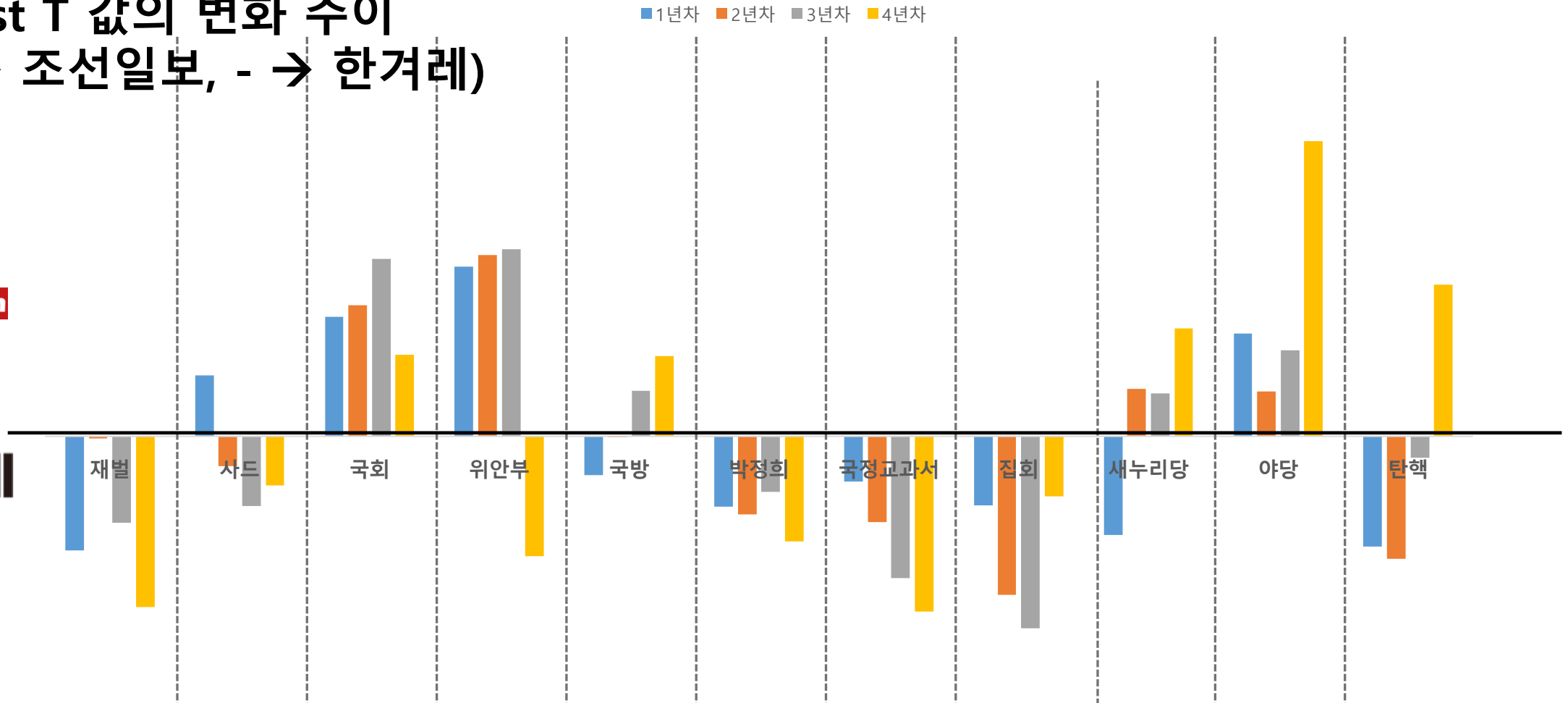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불법파견을 눈감아주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만도 못한 처벌을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한 것은 정부의 태도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 이번 기회에 산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범정부적 조치가 뒤따르기 바란다.

TOPIC 매체별 구성 Results



TOPIC T-test Results by 연도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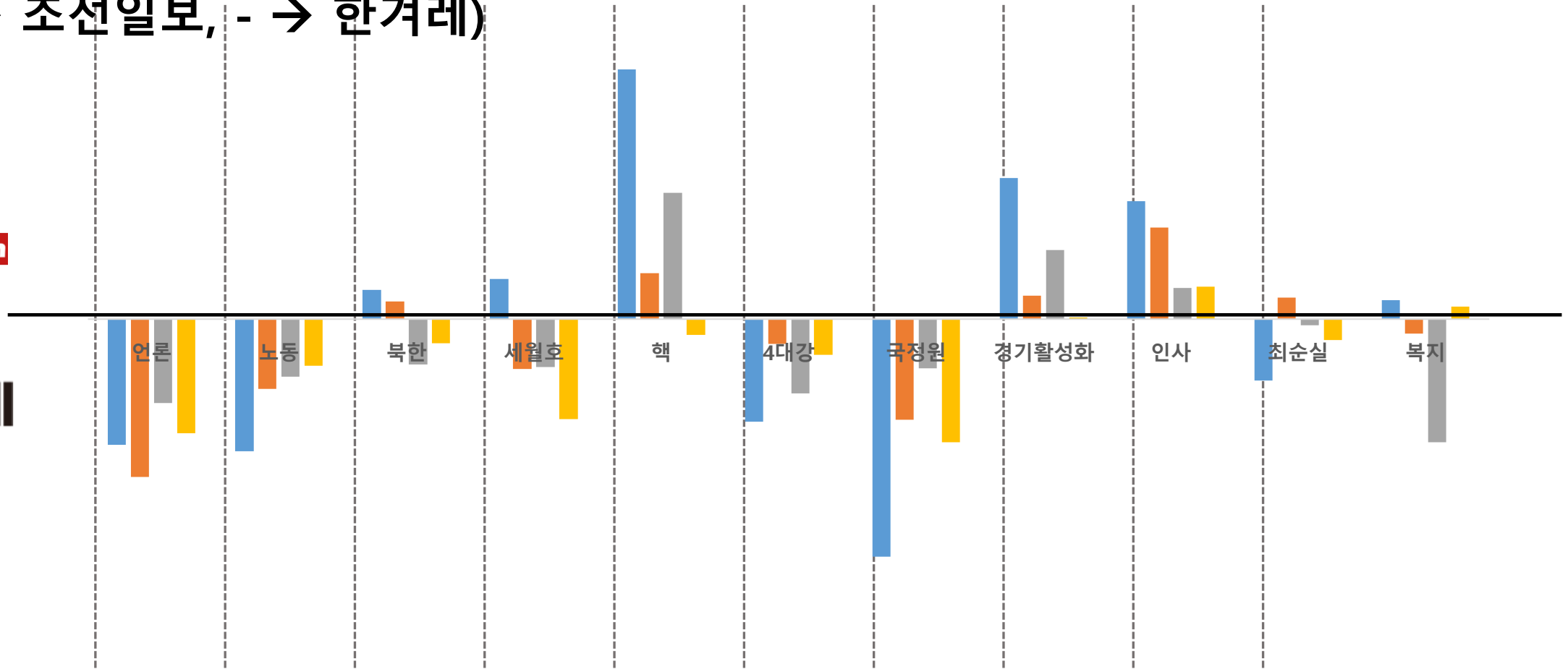
T-Test T 값의 변화 추이
(+ → 조선일보, - →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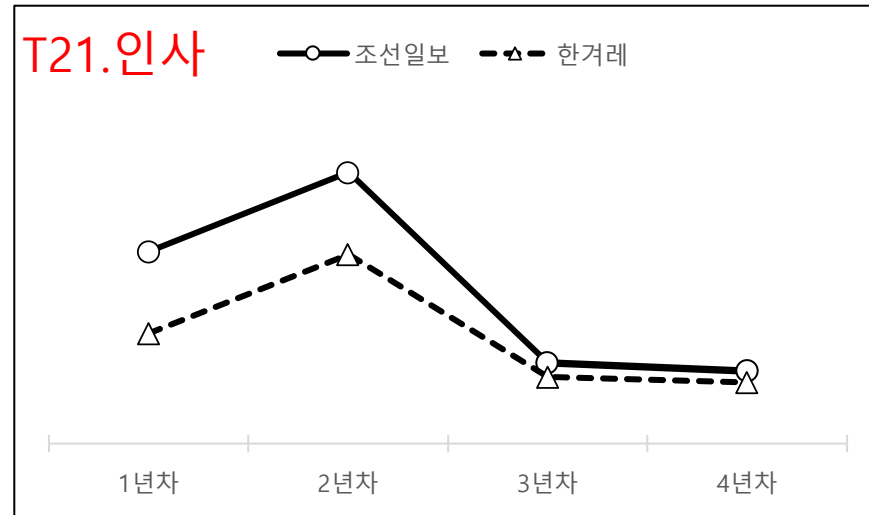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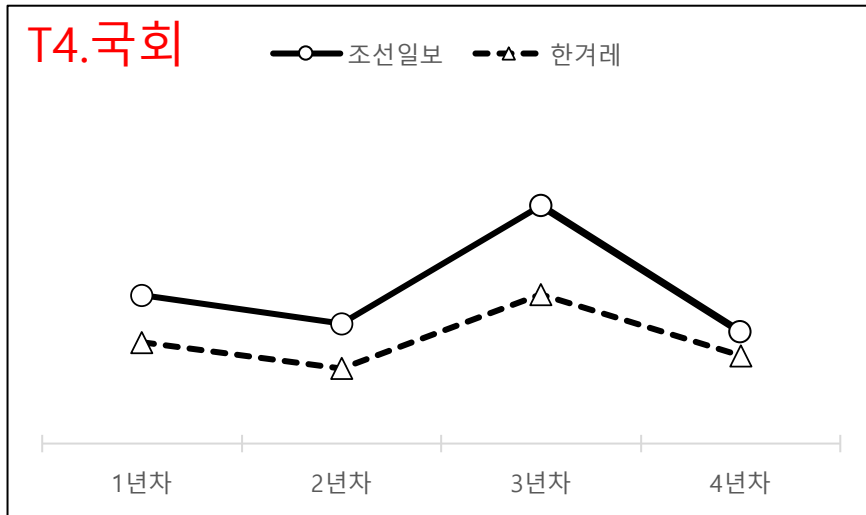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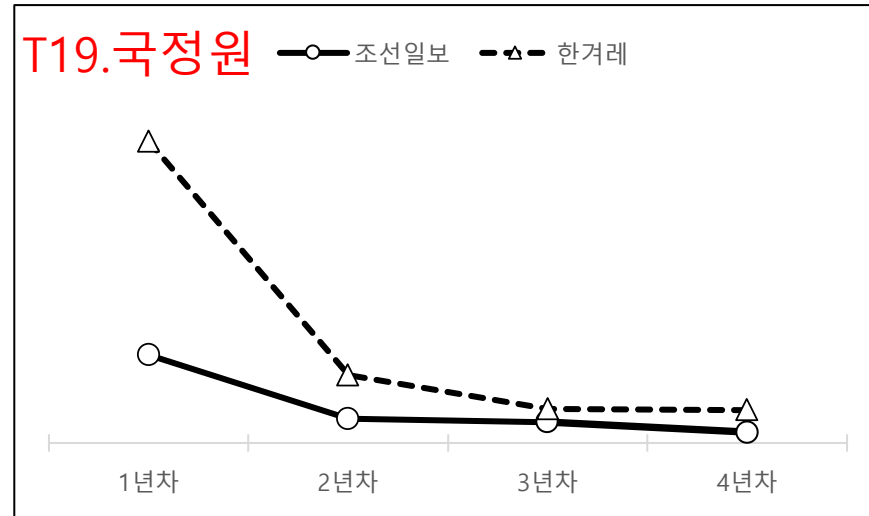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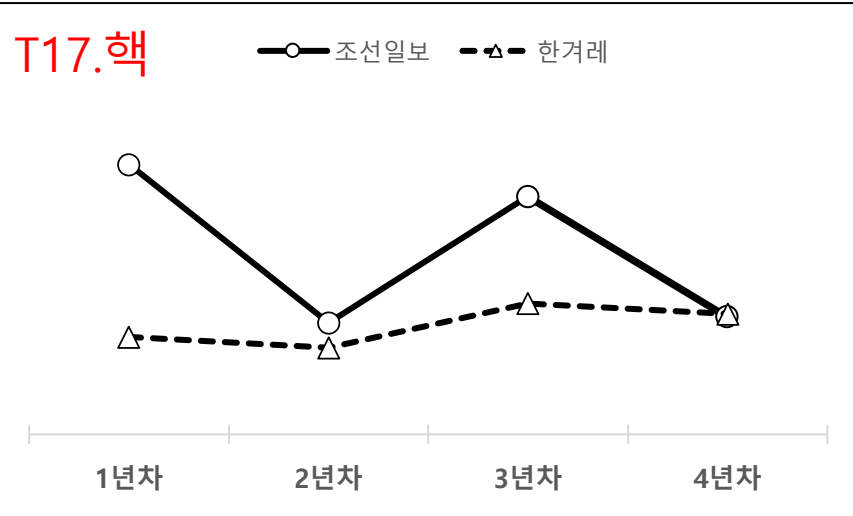
TOPIC T-test Results by 연도별 (2/2)

T-Test T 값의 변화 추이
(+ → 조선일보, - → 한겨레)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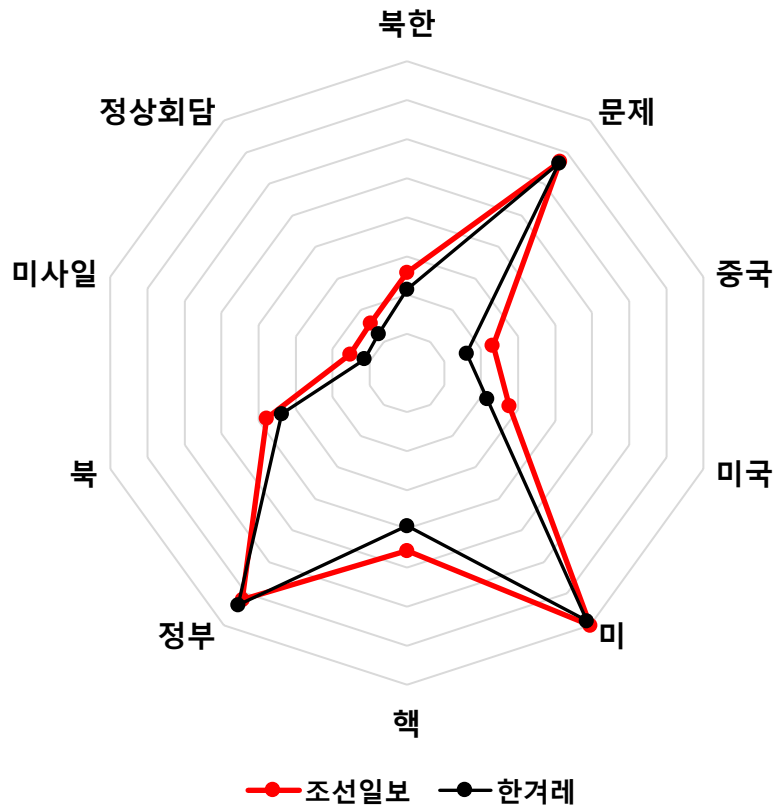


TOPIC Results by 연도별, 매체별



TOPIC 주요 사용 어휘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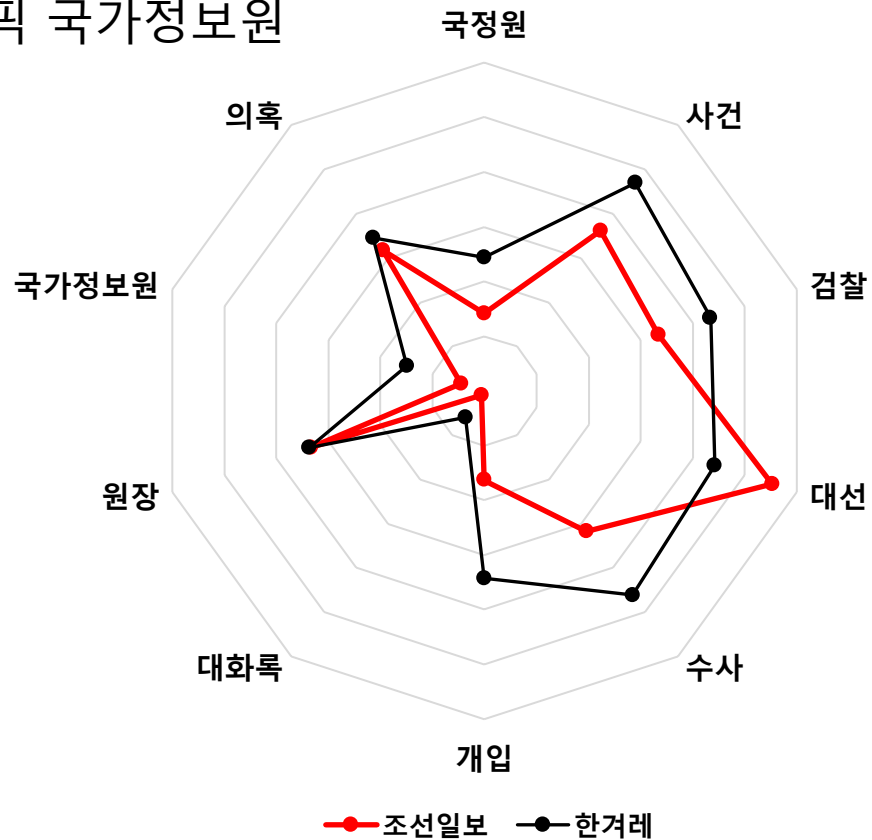
토픽 북핵



어휘	t Score
북한	2.717 _(n.s)
문제	.214
중국	5.101
미국	3.689 _(n.s)
미	.812
핵	3.222
정부	-0.930 _(n.s)
북	2.241
미사일	3.470
정상회담	2.920

TOPIC 주요 사용 어휘(한겨레)

토픽 국가정보원



어휘	t Score
국정원	-4.097
사건	-3.209
검찰	-3.054
대선	3.143
수사	-4.367
개입	-6.420
대화록	-4.247
원장	-0.079
국가정보원	-5.663
의혹	-0.915

정파성 강화와 신문사 수익간 관련성

표2 전국종합일간지의 매출액 추이와 증감률

(단위: 백만 원)

신문사	매출액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향신문	72,591	84,190	80,699	87,439	84,051	-4.15	8.35	-3.87
국민일보	47,516	46,805	46,754	49,807	47,995	-0.11	6.53	-3.64
내일신문	57,525	56,804	41,958	38,257	28,018	-26.14	-8.82	-26.77
동아일보	298,763	284,161	285,655	291,716	287,231	0.53	2.12	-1.54
문화일보	69,462	66,321	66,352	68,385	68,798	0.05	3.06	0.60
서울신문	98,054	89,197	82,992	84,024	85,003	-6.96	1.24	1.17
세계일보	37,426	38,675	39,865	42,662	45,011	3.08	7.02	5.51
조선일보	362,024	341,292	339,273	337,694	329,985	-0.59	-0.47	-2.28
중앙일보	313,206	306,143	293,604	314,391	290,316	-4.10	7.08	-7.66
한겨레신문	85,026	81,659	81,210	82,172	80,182	-0.55	1.18	-2.42
한국일보	73,197	61,609	56,990	60,818	62,508	-7.50	6.72	2.78
합계	1,514,791	1,456,859	1,415,353	1,457,365	1,409,098	-2.85	2.97	-3.31

표3 전국종합일간지의 당기순이익 추이와 증감률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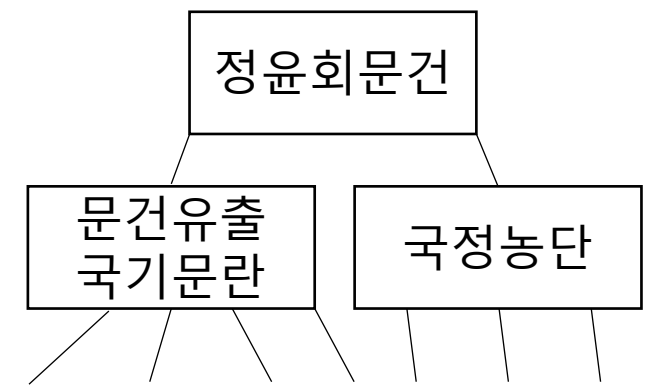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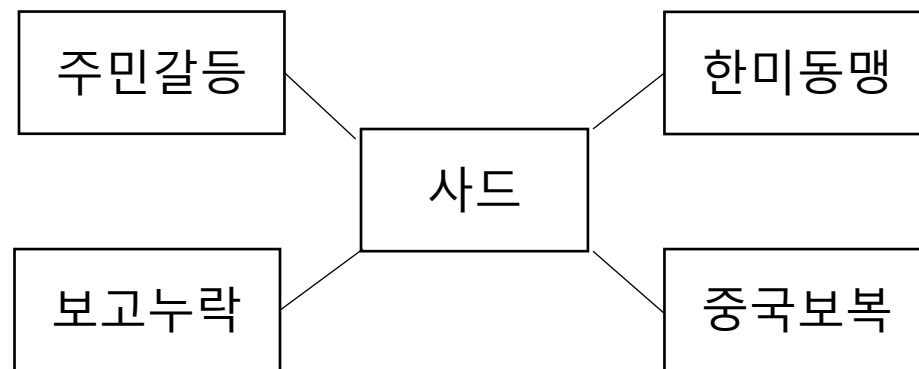
신문사	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감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향신문	855	28,923	348	37,108	5,928	-98.80	10,570.58	-84.02
국민일보	1,140	-979	-207	1,474	198	적자 감소	흑자 전환	-86.58
내일신문	8,858	10,337	10,104	10,084	5,651	-2.25	-0.20	-43.97
동아일보	-30,414	2,676	3,037	8,435	26,566	13.52	177.70	214.95
문화일보	3,103	3,403	3,323	5,467	5,665	-2.35	64.50	3.61
서울신문	-3,121	-7,819	2,030	806	1,036	흑자 전환	-60.28	28.45
세계일보	24,296	743	601	466	966	-19.14	-22.47	107.47
조선일보	23,001	28,126	30,601	30,891	30,064	8.80	0.95	-2.68
중앙일보	-40,424	582	-6,927	21,667	-11,608	적자 전환	흑자 전환	적자 전환
한겨레신문	3,813	2,285	-1,123	795	-81	적자 전환	흑자 전환	적자 전환
한국일보	366	-8,597	3,203	2,638	4,472	흑자 전환	-17.65	69.50
합계	-8,527	59,681	44,990	119,831	68,856	-24.62	166.35	-42.54

이상기(2017), 2016년도 신문사 재무 분석, 발목 잡힌 신문 광고 시장, 신문과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40-47

이념적 정파성 강화와 이슈 오너쉽간의 관련성(Analysis TBD)

결론 및 제언

- 4년간 박근혜 관련 사설의 토픽은 약 22개 정도로 구성됨
- 조선일보는 뚜렷한 토픽을 지속적으로 생산(선명성 담보).
 - 국회, 정당, 핵, 경제, 인사(주요 이슈 훈수정치 연관)
 - 이에 반해 진보지 한겨레의 경우 다양한 이슈를 생산한다.
- 토픽의 선점은 사용 어휘의 빈도와 관련성이 높다
- 갈등 토픽(사드, 역사교과서, 북핵, 경기활성화)에 대한 각 신문사별 세부 논의 필요.
- 타당성 확보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 필요(DiMaggio et al, 2013)



연구의 의의

-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해왔던 언론연구를 LDA 방법론을 차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 처리함.
- 정량적 관점에서 조선일보 저널리즘의 특성을 파악 + 시기별 추이를 정밀하게 추적함.
- 언론학 영역에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제시 가능성

감사합니다